

사면권 통제·감사원 독립기구화...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내용

정외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로 요약된다.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감사원의 독립기구화·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했다.

먼저,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連任)제'를 채택했다. 4년 연임제 채택은 국민헌법자문위 여론조사 결과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만큼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고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 할 경우 이종권력 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적 열망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로 개헌안 부칙에 명시해 4년 연임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리는 기존대로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총리의 역할을 규정하는 헌법 제86조 2항 '행정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없애고

국회 예산심의·동의권 강화

국회 의석 배분 비례성 원칙 명시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구절 가운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총리의 책임성·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명령 없이도 행정각부를 통할 권한이 총리에게 주어져 '책임총리'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정부제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한 뒤 '예산법률'로 확정토록 해 예산심의권을 강화했다. 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을 법률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역시 강화했다.

이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았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특별사면을 하려면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관화하고, 감사위원 9명을 감사원장 제청이 아니라 국회·대통령·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토록 했다. 감사원과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현재소장을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것이 아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맨 왼쪽)이 22일 오후 회의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추미애(가운데)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 헌법재판관 중에 호선을 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다.

이밖에 대통령 개헌안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 의서는 투표자

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법관의 임기규정을

없애고 징계유형에 해임을 추가했다.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가능성을 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개헌안 전달... '공은 국회로'

정무수석 여야 지도부에 설명...한국당·평화당은 면담 거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수석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한 수석은 먼저 이날 오후 1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 "국회가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주시길 당부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다시 한 번 국회의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 대표는 "야당은 '부디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의 개헌안을 정정거리로 삼지 말아 주길 호소한다'고,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오는 26일 이후 5당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헌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각각 말했다.

한 수석은 이어 찾은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로부터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

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행태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회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개정안을 국회에 던지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국력 낭비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본질이고 근본을 만드는 헌법을 개정할 때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철저히 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수석이 마지막으로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자칫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표는 "훌륭한 개헌안 제시에 이어 훌륭한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개헌의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는 정의당의 진심을 청와대가 잘 받아 안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11개장·137조

국회 합의 불발뎀 26일 발의

정외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을 22일 공개했다.

정외대는 20~22일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왔으며, 이날 설명을 마지막으로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한 뒤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어 조문이 다소 늘어났다. 개헌안에선 현행헌법의 제2장 '행정부'에 들어가

있던 감사원을 별도의 제7장으로 떼어냈다. 기존 제7장 '선거관리'는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문에는 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적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도 포함돼 있다.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사회적 가치도 명시했다.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인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개헌안 발의 59.6% 찬성...반대의 2배

호남 72.6%로 가장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2배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21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국회의 개헌 의지가 약하며,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므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9.6%를 차지했다. 반면 '야당이 개헌 무산의 책임을 지우려는 정략적 시도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8.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찬성 의견이 7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65.9%), 경기·인천(64.0%), 대전·충청·세종(58.2%), 부산·경남·울산(54.9%) 등

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29.2%) 의견보다 반대(62.0%)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75.4%), 20대(69.0%), 30대(65.7%), 50대(54.8%)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반대(41.5%) 답변이 찬성(39.9%) 답변보다 약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84.7%에 달했고 반대 의견은 8.2%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3.6%로 반대 의견(26.1%)을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찬성 의견은 26.2%로 조사돼 반대 의견(63.7%)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귀어·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에 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권정기머사우 양식에 나선 오수형 (38)

강원도 홍천 홍천머사우 대표. '이론교육부터 실습, 양식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9월 홍천지역축제기간에 수확해 권정기머사우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 양식 창업하는 이범석 (38)

전남 고흥 청년수산 대표. '전남대 양식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귀어를 결심하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원다리새우 양식에 나선 조현군 (52)

경남 고성 안녕머사우 대표. '교육을 수료한 후 250평의 양식장에서 원다리새우 22kg을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1,500평으로 늘려 20t 출하와 함께 실내그린 양식장을 건립해 연중 출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One-Stop 친환경양식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KIPA 한국어촌어항협회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romotion Association

문의처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055-642-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062-220-0555